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유통 시작

### 종이형 상품권 관련 시스템 오류로 발급 지연 혼선도 현재 가맹점 7000여곳... 제주도 ‘가맹점 확대 총력’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첫 유통을 시작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종이형 상품권, 카드형·모바일형 등 3가지 종류의 ‘탐나는전’ 발행을 시작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이날 하루에만 종이형 상품권 1796매(2420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충전 선불카드의 경우 총 23건(286만원 상당)이 거래

됐다.

반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종이형 상품권 발행이 일부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에 상품권 판매 가격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입력돼야 하는데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입력돼 일시로 종이형 상품권 발행이 지연됐다”며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고 이날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발행을 시작했

다”고 설명했다.

‘탐나는전’은 올해 200억원,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총 37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올해는 카드형·모바일형은 120억원, 종이형 상품권 80억원 등으로 발행되며, 종이형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적용, 카드형·모바일형은 사용 시 10% 포인트가 적립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종이형 상품권인 경우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모바일은 탐나는전 전용 앱을 통

한 계좌이체 충전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종이용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3가지 종류이며, 80% 이상 사용할 경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탐나는전은 제주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가맹점은 7000여곳으로 파악됐다.

도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11일부터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염소의 외출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도로 인근에서 우리를 나온 염소들이 도로를 건너고 있다. 이상국기자

## 논란의 불씨 남긴 ‘송약선언 실천조치 4호’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제동 한국관광공사 2단계 개발 사업자·토지주 반발 예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정정제주 송약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 경관 사유화 등의 이유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제443호)인 주상절리대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의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이 원 지사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허용기준인 제1-4구역에 대해 1구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형성변

경에 따른 개별심의 대상을 2~4구역에도 최대한 적용해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60일 이내 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토대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주도의 입장이 공사와의 사전 의견 교환 및 조율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가 개발 중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라 9층·35m까지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자와의 계약위반 등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해 현행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면 개발사업부지를 공사로 부터 매입한 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로 향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의 주상절리 훼손과 사유화 정도의 기준이 무엇이며, 공사 측의 개발사업 축소 등의 조정없이 이를 보완하며 관광단지를 유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2018년 용역 결과 18필지·1만6754㎡)을 위한 토지 매입은 물론 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토지주들의 피해에 따른 대책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원 지사는 잇단 ‘정정제주 송약선언’을 통해 송약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필두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기존 사업계획과 같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불허 등의 실천 조치를 밝혔다.

백금탁기자

2020 제주애 빠지다 ⑰ 남원읍 의귀리 문화요리교실



화합 행사를 총괄하는 오철호 의귀리체험휴양마을 위원장(왼쪽)과 김기창 의귀리장. 송은범기자

## 특산 음식으로 정착-지역주민 ‘화합’

### 함께 말과 감귤 이용한 음식 ‘만들고 먹고’ 몰랐던 서로의 얼굴 익히는 등 ‘소통의 장’

모르는 얼굴을 보고 곧바로 음식을 권유한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함께 무언가를 먹으니 한 식구(食口)가 된 느낌이다.

특산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마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말과 감귤의 고장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이야기다.

이 만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정착주민은 “의귀리 귀농귀촌모임을 통해 마을 적응을 시작했다”며 “이주민이라 처음엔 걱정됐지만, 정착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는 뿌듯함과 기여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의귀리 체험휴양마을 센터 앞마당에서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천막 안에서 무언가를 분주히 요리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 무리는 감귤을 줄여서 청과 잼을 만들고, 또 한 쪽에서는 말고기에 당근, 부추, 오이, 콩나물 등을 섞은 비빔밥을 만들고 있었다. 의귀리는 과거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의 출신지로 말이 유명했으며, 근래에 들어서 감귤이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농산물의 95% 이상이 감귤일 정도다.

이 행사의 명칭은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요리교실’이다. 의귀리하면 떠오르는 ‘말’과 ‘감귤’을 이용한 요리를 함께 만드는 자리를 마련해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얼굴을 익히기 위함이다. 요리 말고도 아나바다 장터와 천연염색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됐다.

문화요리교실은 당초 여름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하다 이날에야 비로소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이 만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정착주민은 “의귀리 귀농귀촌모임을 통해 마을 적응을 시작했다”며 “이주민이라 처음엔 걱정됐지만, 정착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는 뿌듯함과 기여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철호 의귀리체험휴양마을 위원장은 “의귀리에는 60여가구의 정착주민이 살고 있다. 이중 30가구는 마을운영비를 납부하며 체육대회와 경로잔치, 노래자랑 등 마을 대소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교류는커녕 얼굴도 알지 못해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번 요리교실은 의귀리 특화요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외에도 문화오일장, 의귀말축제, 체험승마 등 정착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귀리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직접 계획해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선정돼 지난 7월 27일 ‘의귀리 특산물 판매장’이 개관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갈등조정특위’이며 ‘제2공항 반대특위’다.

- 1. 갈등해소특위는 갈등해소를 빙자한 이적단체다.**  
 제주도의회는 과거 제2공항 건설을 만장일치로 정부에 요청했다. 이제 와서 정부가 발표한 국책사업을 ‘갈등특위’가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 ‘갈등특위’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유치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대표적인 반대단체 역할만 하고 있다. 차라리 ‘갈등조정특위’나 ‘제2공항 반대특위’로 이름을 바꾸라.
- 2.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다.**  
 혼잡한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했으며 지속적인 시설보수로 누더기가 됐다. 무리한 운항 증대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한 번의 실수로도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 3. 제주공항 확장은 무모한 억지주장이다.**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연장하는 것은 억지논리이다.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엄청난 건설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없다. 제주도 도심의 교통, 쓰레기, 오,폐수 문제와 인근지역의 소음피해가 가중된다.
- 4. 제2공항은 꼭 필요하다.**  
 하늘 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이다.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고 미래 항공수요를 대비해야 한다. 제2공항은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 5.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 경쟁력이다. 이제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때쓰기 억지주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멈춰야 한다.
- 6. 제2공항은 모든 국민(도민)이 이용하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성산을 주민들이 입게 된다.**  
 제2공항으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성산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 왔다.

**도민의 2.4% 밖에 안 되는 성산을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해도 되는 것인가? 소수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는 것이 진정한 제주도의회의 선택인가?**

##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